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 정답 및 해설

*수정일 : 2020.10.13.(화)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⑤ 06. ② 07. ③ 08. ② 09. ② 10. ③
11. ① 12. ③ 13. ② 14. ③ 15. ④ 16. ① 17. ② 18. ③ 19. ① 20. ③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정치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정치로 본다. 따라서 을의 관점은 갑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 현상이 국가 차원에서만 나타난다고 보므로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③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과 달리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정치라고 본다.

2.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정답 해설 : 법치주의의 유형 중 법률의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는 A는 형식적 법치주의, 합법적 절차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고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부합해야 한다는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⑤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 ②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 ③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가 합법적이기만 하면 독재 정치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가)는 국민 주권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

리이다. ②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국민 투표제, 민주적 선거 제도의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복지 국가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 ③ 자유 민주주의 중 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 ④ 권력 분립 제도는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에 해당한다.
-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 강조된다.

4. 기본권 유형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기본권 유형 중 A는 자유권, B는 청구권이다. ④ 청구권은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자유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②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본질적 권리는 평등권이다.
- ③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될 포괄적 권리이며, 청구권은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이다.
- ⑤ 청구권은 자유권과 달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된다.

5.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정치 참여 집단 중 A는 시민 단체, B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이다. ⑤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시민 단체는 집단의 특수 이익보다 공공선과 공익 실현을 우선시한다.
- ②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의원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다.
- ③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④ 시민 단체, 이익 집단 모두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6.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이해

정답 해설 : 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국가 기관은 국회, 대통령이다.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감사의 권한을 가진다. ㄷ. 국정 감사권을 가진 국가 기관은 국회이고,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는 국가 기관은 감사원이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ㄱ.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은 국회이고, 국회, 대통령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권한을 가진다.
- ㄷ.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가진 국가 기관은 대통령이고,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국회의 장(長)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아니다.

7. 법원과 헌법 재판소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법원, (나)는 헌법 재판소이다. ③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 권한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위헌 법률 심판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②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 ④ 같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심급 제도를 두고 있으나, 헌법 재판소는 심급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8.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기소로 인해 검사와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법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법원에 신청해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③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 ④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구금된 적이 있다면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에 구금되어 있지 않더라도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활용될 수 있다.

9. 정치 참여 방법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시민 단체를 통한 집단적 정치 참여, (나)는 선거를 통한 개별적 정치 참여, (다)는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 참여, (라)는 정당을 통한 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ㄱ. (가)는 집단적 정치 참여, (나)는 개별적 정치 참여이다. ㄴ.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치 참여는 시·공간의 제약을 완화시켜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ㄴ. (가)~(라)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 ㄴ. (가)~(라) 모두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10.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

정답 해설 :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중 A는 계약 공정의 원칙, B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 C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ㄴ.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이 경우에 공작물 등의 소유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므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ㄴ. 소유권 공

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면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으나,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 내용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역시 현대의 사법 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다.

11.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정답 해설 : ㄱ.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병이 갑에게 자전거를 배달하지 못한 것은 채무 불이행이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ㄷ. 갑의 법정 대리인인 을은 자전거 구매 계약에 대해 동의하였다. 따라서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자전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ㄹ.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갑의 법정 대리인인 을은 자전거 구매 계약에 대해 동의하였으므로 병은 을에게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12.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ㄴ. 애완견의 점유자인 B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을 진다. 반면에 동물의 소유자인 A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ㄷ. 책임 능력 여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갑이 책임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을과 병은 책임 능력이 있을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ㄱ. B는 A의 애완견을 무사하게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A와 체결하였을 것이다. A의 애완견이 다쳤으므로 B는 A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ㄴ. 을이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을의 법정 대리인은 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을 진다.

13.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불기소 처분 중 기소 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고소 및 고발, 범인의 자수 등에 의해서 수사 절차가 시작된다. 갑의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는 기소이며 검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③ 형을 선고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면 형벌 이외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선고 유예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은 집행 유예이다.
- ⑤ 형 집행 중 형기 만료 전에 석방될 수 있는 제도는 가석방 제도이다. 보석 제도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다.

14. 혼인, 이혼, 친자 관계, 상속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③ 을과 병은 사실혼 상태에서 B를 출산하였으므로 B는 을과 병의 혼인 외 출생자이다. 혼인 외 출생자는 인지 절차를 거치면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병이 B를 인지하였으므로 병은 B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혼인 전에 형성한 을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부부 별산제가 적용되므로 갑은 임의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 ② 이혼 소송도 민사 소송과 같이 3심제가 적용된다.
- ④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 ⑤ 을과 병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이므로 병이 사망한 경우에 을은 법정 상속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다.

15.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ㄱ. 자유주의적 관점은 인간을 이성을 가진 존재로 보므로 도덕적 규범에 따른 외교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ㄴ.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것은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ㄷ.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고 본다.

16.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A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고, B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이며, C는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이다. ①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 요건의 유형화를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구현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심신 상실자의 행위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규정이 명확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 ④ 명확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며,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법관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⑤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도 적용된다.

17. 근로자의 권리 구제 절차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②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 절차를 거쳤다. 왜냐하면 갑의 행정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사용자는 단체 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
- ③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 ④ 사용자에 의해 정당한 근로 3권 행사가 침해된 것을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한다. 적법한 쟁의 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갑, 병은 을과 달리 부당 노동 행위를 당한 것이다.
- 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 노동 행위는 갑과 병에만 해당한다.

18.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정답 해설 :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이 선출되므로 갑국과 병국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을국과 정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제에서와 달리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이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다른 인물이다.
- ② 의원 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므로 의회의 신임을 받는 동안에만 행정 권력이 유지된다.
- ④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갑국이 그렇지 않은 병국보다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⑤ 연립 내각은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의원 내각제에서 구성된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국제법의 법원 중 A는 조약, B는 국제 관습법이다. ①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 중 국회를 통과한 조약은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조약은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할 수 있다.
- ③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에 의해 법 규범으로 승인되어 효력을 가지게 된 국제법이다.
- ④ 조약과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그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하다.

20. 선거 결과 분석

정답 해설 : 갑국에서는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인을 의원으로 선출하므로 (가)는 소선거구제이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개편된 선거구제인 (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현행 및 개편안의 선거 결과는 표와 같다.

구분	A당	B당	C당	D당
현행	3석	2석	0석	0석
개편안	$5 \times 630 / 2000 = 1.575$ → 2석 배분	$5 \times 810 / 2000 = 2.025$ → 2석 배분	$5 \times 460 / 2000 = 1.15$ → 1석 배분	$5 \times 100 / 2000 = 0.25$ → 0석 배분

③ B당의 현행 의석수는 2석이고, 개편안에 따른 의석수도 2석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
- ② A당의 현행 의석수는 3석이고, 개편안에 따른 의석수는 2석이다. 따라서 A당이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에는 개편안보다 현행이 유리하다.
- ④ C당의 현행에서 당선자가 없지만 개편안에 따른 의석수는 1석이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사표가 적게 발생하고 현행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완화된다.
- ⑤ D당은 현행과 개편안 모두에서 의석수가 0석으로 과소 대표되었다.